

지속가능한 노동존중 노사관계 : 라틴아메리카의 교훈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제도를 평가하거나 설계할 때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노사관계도 다르지 않아서 해외 노사관계의 사례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귀중한 참조가 될 때가 많다. 이번 호에서 다루게 되는 라틴아메리카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는 그 자체로도 값진 정보이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관심사인 노동존중 사회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구현할지와도 관련되어 있어 흥미롭다.

라틴아메리카의 노사관계는 유럽이나 영·미형 혹은 일본식 노사관계와는 다른 특징이 있으며 정치·경제적 환경에 의해 꾸준히 영향을 받고 변화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실제 라틴아메리카는 오랜 기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국가의 식민지였으며 독립국가로 전환된 이후 정치적으로는 독재정권, 경제적으로는 초국적 해외자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왔다. 독재정권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적 배경은 강한 노동조합의 출현과 관련되어 있으며 촘촘한 노동법은 해외자본의 수탈로부터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 되기도 하였다. 일찍이 던롭(Dunlop)이 노사관계를 규칙들의 망(Web of Rules)이란 표현으로 정의한 바 있는데, 라틴아메리카의 노사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행위자와 함께 제도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최근 관심사인 노동존중의 노사관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 왜 하필 라

틴아메리카의 사례를 참고하려고 하는지인데, 이는 라틴아메리카 다수 국가가 경험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수정과 관련되어 있다. 1980년대 세계화와 함께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라틴아메리카의 주요국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급속하게 받아들였으며 이는 노동유연화, 노조탄압, 비공식노동의 활동, 소득양극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2000년대 등장한 중도좌파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정, 노동친화적인 제도 및 노사관계 정책을 추진해 왔다. 비록 최근 경제성장 둔화 및 중도좌파 정부의 부패 등으로 인해 기존의 노동친화적인 정책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라틴아메리카의 노사관계 변화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먼저 Bruno Dobrusin과 Juan Montes Cato는 라틴아메리카의 노사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정치경제 시스템에 주목하였다. 저자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들이 국가코포라티즘(State Corporatism)에서 신자유주의로, 그리고 신자유주의에서 중도좌파로 변화해 왔으며 여기에 기초해 노사관계도 변화해 왔음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1960~1980년 후반까지의 국가코포라티즘 시기에 정부는 노·사 대표권을 독점적으로 인정하고 노·사는 국가정책에 적극적인 협조자로 역할을 하였으며 이로부터 담합적 노사관계가 가능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신자유주의는 아웃소싱의 증가, 비공식노동의 증가, 노조 약화를 가져왔으며 대립적 노사관계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분열과 노동위기를 가져 왔으며 그 결과 중도좌파 정부가 등장으로 정치지형이 달라지는 데 기여하였다. 중도좌파 정당의 등장으로 인해 개별적 노동기본권 및 집단적 노조법이 크게 강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로 인하여 라틴아메리카의 노사관계는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는데, 저자들에 따르면 국가의 영향력 축소되고 사업장 노사관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Carlos Salas와 Christian Caldeira가 분석한 라틴아메리카 노동시장은 비공식노동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이 특징적인데, 저자들은 라틴아메리카의 1인당 GDP성장률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경제성장의 둔화가 노동정책 및 정치적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정책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 브라질에서는 2017년 노동법이 개정되어 기업별 노사합의 우선적용, 근로계약의 유연화,

노동세(하루 임금) 폐지 등이 이루어졌다. 칠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고용불안이 늘어났으며, 멕시코에서는 외주·하청노동이 크게 증가하였고 아르헨티나에서는 빈곤층이 크게 늘어났다. 저자들은 이러한 노동정책의 후퇴가 보수적인 경제정책으로의 변화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기획특집에 실린 논문 두 편의 공통점은 라틴아메리카의 노사관계가 매우 역동적임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노사관계가 과거 국가코포라티즘에서는 정부주도로 발전했다가 그 후 신자유주의 시기에는 시장(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중도좌파의 집권시기에는 노동중심성을 확보했다가 최근 경제위기와 함께 방향 변화의 흐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라틴아메리카 노사관계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소 극단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은 서두에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이들 국가의 역사적인 배경도 참조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숙된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부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대에 힘 있는 세력에 의해 노사관계가 좌우된다면 노사관계는 언제나 정치의 하위변수일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인 존중과 정의는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이 존중받고 정의로운 사회로 다가가기 위한 지속가능한 노사관계는 대통령이나 집권당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도 쉽게 허무를 수 없는 사회적 담론을 차곡차곡 만드는 일로 라틴아메리카의 사례는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KLI**